

‘행정통합’ 속도전에 통합교육감·교원 인사 ‘뇌관’

통합교육감 선거 시기·교육자치권 놓고 교육계 이견 이해관계 복잡·교원단체 찬반 속 숙의 과정 요구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교육통합 추진 여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 교육감 선출 시기와 방식, 교원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통합이 행정통합의 성과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했다.

1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최근 행정통합 추진과 연계해 교육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양 교육청은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단일 통합 교육감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선출 시기와 권한 구조 등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가장 큰 쟁점은 통합 교육감 선출 시점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할지, 행정통합 이후 차기 선거로 미루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